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극적 평화 실천사업: 평가와 제언\*

양길현 | 제주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글은 평화의 섬 지정 이후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세계평화의 섬이 교류협력 중심의 ‘세계’(통일과 연대)에 치우쳐 있는 데서 벗어나 ‘인간’(복지)과 ‘자연’(생태) 차원에서의 평화 확산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에 주목하였다. 향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세계-인간-자연’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각각 통일평화와 연대평화, 복지평화 그리고 생태평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의 섬 제주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적극적 평화를, ‘세계’와 관련해서는 감귤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과 ODA를 통한 국제평화봉사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간’ 차원으로는 빈곤 해소와 격차 줄이기 등을 통한 복지권 확대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기후변화에의 대처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섬 실현 가능성으로 타진하였다.

이 글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적극적 평화 사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평화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이른바 ‘실천-의식의 선순환’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은 선실천 중시의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통일평화와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연대평화에 덧붙여 복지평화와 생태평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평화의 섬 이념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실용적 정책제언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세계평화의 섬이 다양한 방식과 통로로 평화사업을 실천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평화의식 고취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평화의식을 창출-공유-확산-심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일상적 삶에서 세계평화의 섬의 비전에 어울리는 평화문화가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주제어 | 세계평화의 섬 제주, 적극적 평화, 통일평화, 연대평화, 복지평화, 생태평화,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들어가면서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법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유네스코 헌장 전문의 첫 구절이다. 유네스코 헌장은 이렇게 평화의 시작을 인간에게서 찾고 있다.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렇게 제주도민의 평화의식을 단순한 세계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까지 한 단계 고취해나가고 이를 통해 제주를 동북아 평화 구현의 초석으로 삼고자 했던 데에 있다.<sup>1)</sup>

전쟁 반대로서의 평화를 넘어서서 제주도민들이 환경오염과 난개발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 데에는, 제주 섬 특유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의 경제적 고려가 존재한다. 연 1,000만이 넘게 관광객이 오가는 제주로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청정 환경이야말로 최대의 자원이라는 실용주의적 생각이 일찍부터 자리하게 되었다.<sup>2)</sup> 또한 제주의 경우 오늘날까지도 상상과 억압을 줄이고 적극적 평화를 구현해 나감에 있어 인권신장에 유별 강조점을 두게 된 데에는 반세기에 걸친 4·3의 아픔과 특히 지난 10년간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불법과 강압에 대한 비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제주평화헌장에서 보듯이 제주의 전통적 삼무정신과 문화적 가치와 정상외교 경험 등과 실용적 차원의 고려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데 한 몫 했다.

2005년 1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게 된 데에는, 이렇게 적어도 그 시작에 있어서는 제주도민 풀뿌리의 인권의식과 평화지향을 참여정부가 수용해 나가려는 하의상달적 흐름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다만 실제 정책입안 과정에서

- 
- 1)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는 제주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제주공동체를 만들고자 애를 써 왔던 제주도민의 기나긴 인권평화 운동 노고를 치하하려는 인권의식 발현과 함께 제주에서의 정상외교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한중일 동북아에서도 갈등 조정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대외전략적 고려도 크게 작용하였다.
  - 2)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연구단이 제주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제시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태운 2015)

는 당시 동북아시아위원회가 제주의 지정학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남북한 및 동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 점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5조 2항에서 보듯이,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로 국제평화와 교류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은 평화의 섬 지정 이후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세계평화의 섬이 ‘세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통일과 연대)에 머물지 않고 ‘인간’(복지)과 ‘자연’(생태) 차원에서의 평화까지도 아우르는 평화사업 영역의 확산과 도약을 촉구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세계평화에 주목하면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한편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은 소극적 평화의 긴요함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이 글은 기왕에 참여정부가 제주에 평화의 섬 정책을 펼 요량이었다면, 연대-복지-인권-생태 등 적극적 평화의 가치들을 보다 더 많이 담아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용했다는 입장이다. 돌이켜 보면 나름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어 온 강정해군기지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제주에서의 평화 또는 제주를 통한 평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청사진이 부족했다는 것은 모처럼의 평화의 섬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다른 경험이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더욱 지방자치 수준에서 세계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방치되었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평화 실천사업이 새로운 시도인 만큼 그 공백과 여지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의 지향과 방향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평화의 섬 모형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크게 비무장 평화시대 모형, 경제특구 모형, 국제교류협력의 거점 모형 그리고 인권·생태평화 모형 4가지 나누어 미래 가능성을 진단하고 실천 방책이 제시되곤 하였다.(강근형 2007; 김부찬 2002; 신용인 2013; 양길현·장원석 2002) 이 가운데 초기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세계(연대) 모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규정된 바의 국제교류협력이었다. 국제교류협력은 세방화(glocalization) 이후 새로이 대두하는 ‘멀티트랙 외교’(고경민 2008)의 이름으로 널리 각광을 받

았다.

이처럼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담겨져 있는 국제정치적 고려가 중시되는 가운데,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에는 제주평화포럼<sup>3)</sup>을 관장하는 제주평화연구원과 유니타르(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국제교류협력의 담론장으로 역할을 하였다. 평화아카데미를 통해 평화교육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평화의식 함양을 도모해 나가는가 하면, 해마다 1-2회씩 몽골,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저발전된 몇몇 나라에 평화봉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의 감귤 북한 보내기 등 사업은 지난 6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딱 막힌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2012년에 가까스로 제주도정은 ODA 원년을 공포하면서 대외적 평화봉사의 틀을 만드는가 싶었지만, 이 역시 제주도민 풀뿌리의 호응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채 재원상의 제약으로 인해 아직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주도민 풀뿌리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평화실천 사업을 찾아나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혜의 모음이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제주 지방 수준에서 추구해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론화하여 합의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국제정치 차원에서의 남북한 및 동아시아 국제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화의 섬 지정을 ‘국제자유도시의 브랜드’<sup>4)</sup>로 활용하면 족하다는 일각의 경제중심적 발상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평화실천 정책 찾기는 풀뿌리 도민의 실생활에서 “호혜적 공존의 심성을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황규성 2014, 60)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된다. 그래서 이 글은 또한 제주가 평화의 섬 지정

3) 지방 수준에서의 대표적 공공국제포럼인 제주평화포럼은 ‘한국판 다보스포럼’을 목표로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꾸준히 개최되어 나가고 있다.

4)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을 흔쾌히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제주도가 제시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평화를 브랜드로 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육성”(제주도 2005, 1)하고자 하는 당시의 국제자유도시 중심적 정책 사고가 크게 작용하였다.

을 계기로 일상에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평화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이른바 ‘실천-의식의 선순환’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실천과 의식의 선순환 과정 가운데 선실천에 비중을 두면서, 이 글은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통일평화와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연대평화에 덧붙여 복지평화와 생태평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평화의 섬 이념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실용적 정책제언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 II. 세계-사람-자연 차원의 적극적 평화

평화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지만, 평화 실천 사업은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성을 지닌다. 바로 이 점에서 한반도 평화론은 “세계적인 상호연관성과 보편적 함의를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시공간성을 담보하는 이중적 접근”(박명규·백지은 2013, 41)을 요한다. 한반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주목하면서 “분단구조의 해소, 생활세계의 녹색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연대라는 세 가지 차원의 평화”를, 각각 통일평화-녹색평화-연대평화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이다.(박명규·백지은 2013, 67-71)

이렇게 한반도 발 평화인문학의 방향 설정으로 제시한 바, “평화와 통일, 인문학적 사유와 사회과학적 분석, 민족적 시선과 전세계적 시야, 그리고 역사적 무게와 미래지향적 문명론을 연결시키고 통합하려는 시도”(박명규·백지은 2013, 67의 각주19)는 유용해 보인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통일-녹색(생태)-연대라는 3가지 차원의 한반도 평화인문학을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론은 이에 추가하여 점점 더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주된 정치사회적 최대 쟁점으로 화하고 있는 21세기 현실에서 민생에 중점을 두는 복지의 문제를 덧붙이는 데서 화산섬이라는 측면에서의 제주의 특수성(생태 평화)과 보편성(통일평화와 연대평화 그리고 복지평화)을 담아내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평화연구는 안보 중심의 소극적 평화에 머물러 왔고,

그래서 일상에서도 평화는 전쟁의 반대로서만 널리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비판적 평화학의 대표자 격인 요한 갈통(Johannes Galtung 1968, 487)은 소극적 평화와는 다른 차원의 적극적 평화를 제시함으로써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시켰다. 즉, 폭력이 없지만 어떤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도 없는 ‘소극적 평화’에 대비하여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적극적 평화’를 주창한 것이 그것이다. 전쟁만이 아니라 폭력, 그것도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문제 삼으면서 삶과 문화 전반에서의 평화 구현을 강조했다는 데서 비판적 평화론자의 논지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크게 유용하다.

당연히 전쟁과 직접적 폭력이 부재하는 것으로서의 소극적 평화는 누구나 어디서든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평화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와 정치는 인간과 사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서의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에, 소극적 평화는 안보와 치안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적극적 평화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의 평화도 전쟁과 직접적 폭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 평화의 일차적 중요성은 자명하다. 더욱이 탈냉전 이후에도 기대와는 달리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미중 및 중일간의 경쟁이 편재하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안보 중심의 소극적 평화의 긴요함은 그 누구도 무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2005년 제주가 새삼스럽게 ‘세계평화의 섬’(Jeju Island of World Peace)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새로이 떠맡게 된 평화 과제는 단순히 전통적인 소극적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국가안보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전통적 평화론에서 벗어나 우선은 1994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의 ‘인간안보’<sup>5)</sup>에 기초하여 인권과 복지, 생태 등 제주 지방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일상적 평화를 찾아 확산과 심화를 보인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즉, 바람직한 공동체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세계평화, 사회정의, 경제발전, 환경보호에 대한 포괄적 접근”(Palme Commission 1990, 167)

5) UNDP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안보는 “기아, 질병, 범죄 그리고 억압 등 상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일상생활에서의 갑작스럽고 유해한 붕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다.(Overview of HDR 1994, 5)

으로서의 적극적 평화가 바로 평화의 섬 제주의 목표이자 이상일 것이다.

2015년 5월 제10회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단순히 전쟁 없는 평화에서 벗어나 치유의 평화, 관용의 평화, 에너지의 평화로 확산된 새로운 평화의 시대”(원희룡 2015)를 열어가자고 언명하였다. 이는 소극적 평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수준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적극적 평화의 가치를 보다 더 확산시켜 나가자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나아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란 “적극적 평화만이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라는 갈통(2000, 87)의 지적을 심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 왜냐하면 “적극적 평화에 목표를 맞추지 않으면 소극적 평화도 달성되지 않거나 흔들리게”(정주진 2015, 26)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쟁과 폭력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분쟁지역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새로운 인식의 적극적 평화에만 몰두하는 것은 혹 문제일 수도 있다.(임현진 공석기 2014, 121) 그럼에도 ‘구조적-문화적 폭력’<sup>6)</sup>까지도 제거된 상태의 적극적 평화를 주창하고 기대하는 비판적 평화론자들의 비전이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지향에 더 잘 어울린다고 보는 이유는, 세계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에 머물지 않고 인권과 복지 등 인간 차원과 환경과 생태 등 자연의 차원도 함께 아우르는 것이 제주특별자치의 존립의의에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치가 더 중대한 사안이고 그래서 국가안보의 일차적 긴요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sup>7)</sup> 지방 수준의 일상에서는 전쟁은 멀고 빈곤-오염-질병-무질서-억압 등과 같은 비평화가 더 가까이 실재하고 있다면, 평화의 섬이 적극적 평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는 것은 일면 자연스런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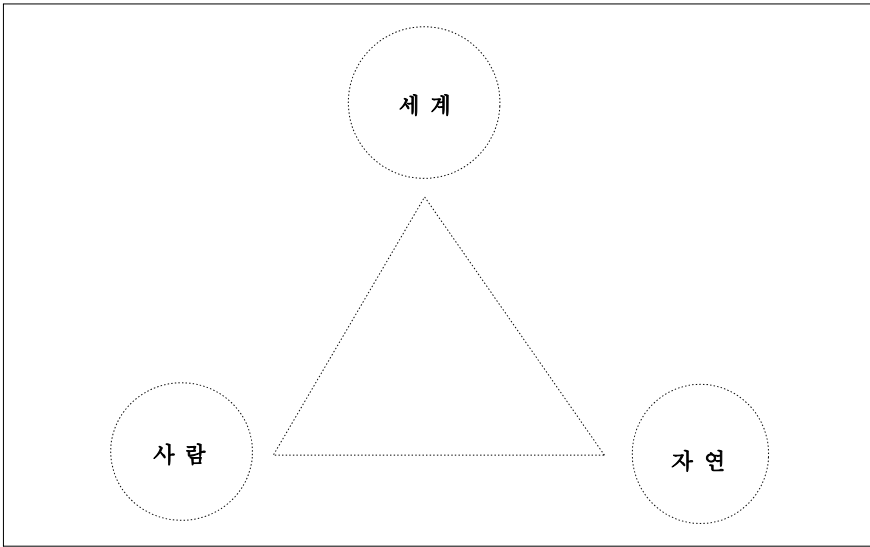
요약하면, 이 글에서 설명틀로 세계-사람-자연이라는 3가지 차원에 한정된 것은, 갈통(2000, 17)이 제시한 바 ‘자연, 인간, 사회, 세계, 시대, 문화’ 등 평화의

6) 정주진(2015, 20-23)은 구조적 폭력의 사례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그리고 문화적 폭력으로는 가부장적 시선, 인종주의적 시선, 차별적 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그럼에도 안보의 긴요성과 관련하여 이 글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방식의 국가안보 추구보다는 예를 들면 ‘협력안보의 시각’(양길현 2005)으로 교류협력 등 외교적-경제적 방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6개 탐구 영역 가운데 세계와 사람, 자연이라는 3개의 탐구 영역에 중점을 둔다는 뜻이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이 글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반도 발 평화인문학의 3영역인 통일-녹색(생태)-연대에 복지를 추가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적극 나서야 할 4가지 적극적 평화실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세계-사람-자연 3차원이 통일-연대-복지-생태 4영역으로 나뉘게 된 것은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 차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극적 평화 3차원



1) 세계: 통일과 연대, 2) 사람: 복지, 3) 자연: 생태

첫째는 ‘세계’ 차원이다. 여기서는 남북교류협력(통일평화)과 국제평화봉사(연대평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인데, 세계라는 하나의 차원에서 통일과 연대라는 두 개의 영역 묶어낼 수밖에 없다는 데서 이는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람’ 차원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빈곤 해소와 격차 줄이기 차원의 복지평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셋째는 ‘자연’ 차원으로, 이를 통해 생태와 지속가능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10년이 지나면서 점차 평화의 초점 영역이 ‘세계’에서 ‘생태’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다.<sup>8)</sup> 이 점은 2015년 5월 제10회 제주포럼에서 원희룡(2015) 지사가 “제주의 청정 대자연은 휴머니즘조차 초월한 생명공동체”라고 지적하면서 ‘치유의 평화’와 ‘에너지의 평화’를 강조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III. 평화실천 사업의 4가지 갈래

#### 1. ‘세계’ 차원: 통일평화와 연대평화

##### 1) 통일평화: 남북교류협력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인은 같은 민족 간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반전반핵과 같은 소극적 평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군사적 대치를 어떻게 줄이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역시 소극적 평화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감귤 보내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남북교류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를 위시로 하여 꾸준히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방안을 찾아나서고 있다. 다만 2015년 현재까지의 지난 6년 동안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실적이 전무한 것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09년 1월 6억원어치 감귤 300톤과 당근 1,000톤을 북한에 보낸 이후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줄 곧 북한에 감귤 보내기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키고 있는 대표적 5·24 조치에 주목하게 되면, 미래의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정주진(2015)이 주창하는 관계평화학이 돋보인다. 왜냐하면 평화의 관계성이 의미하는 바, “평화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대와 함께 이뤄내는 것이지, 독백이나 일방적인 선언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정

8) 이와 관련 양길현(2015)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에서 생태평화의 섬으로의 나아갈 것을 적극 주창하고 있다.

주진 2015, 57)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한이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서라도 구조적으로 남한은 혼자만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남한이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한, 남북한 접촉을 불허하는 2010년대 남한 정부의 5·24 조치는 반평화적 대북정책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5·24 대북조치는 남한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북한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일방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통일평화와 관련하여 모종의 방책과 돌파를 보여주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5년간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의 강경정책에 순응하는 걸로 머물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세계평화의 섬의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주도민 주도의 어떤 통일평화운동이 요청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대북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들을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해서 강요하는 구조 그 자체를 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가하는 담론운동도 그 하나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는 이른바 보수층의 비호 하에 ‘종북 씌우기’가 득세하고 있다. 반공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종북 씌우기 역시도 통일평화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종북 씌우기는 안보와 경제성장 말고는 모든 것을 불온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황규성 2014, 45) 종북 씌우기와 같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달리 가해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사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실제로는 직접적 폭력에 버금간다. 그래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부터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5·24 조치와 종북논쟁 등을 해소해 나가는 일련의 담론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중간목표라는 차원에서 향후 5·24 조치가 해소되면 자매결연 등의 연대교류에 적극 나설 필요도 있다. 즉,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고려할 때, 향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상지를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진희관 2014, 137)한다는 것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 접경지역인 황해도와 북강원도를 그리고 서울은 평양을 추천하고 있다. 이 경우라면 제주는 한라-백두를 매칭으로 하여 백두산이 자리하고 있는 양강도

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백두-한라의 상징적 연계를 고려해서인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2013)의 <세계평화의 섬 사업 변경 계획>은 기존의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과 제주에서의 각종 남북한 회담 개최에 이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과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sup>9)</sup> 이에 덧붙여 원희룡지사는 2014년 동북아 평화증진과 남북한 모두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면, “제주-북한간 크루즈관광라인 구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윤철수 2014)을 요청한 바도 있다. 여전히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기획과 준비 중에 있을 뿐이다.

## 2) 연대평화; 국제평화봉사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1995년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sup>10)</sup>함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에서 뒤늦게 동참하였지만 발 빠르게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여 유상원조를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무상원조를 책임 맡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2011년까지 약 78억 달러의 대외원조를 제공”(강주홍 2012, 9)하였다. 2014년의 경우 한국의 ODA사업 총 규모는 “약 2조 2,666억 원인데, 이는 2013년 규모 대비 약 2,255억원이 증가(11%)”(문순덕 2015, 8)한 것이었다.

이렇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 국제 평화봉사 활동이 진전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일반 국민들이 ‘우리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데 남의 나라까지 도와야 하느냐’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2009년에 24번째로

9) 그 외에도 마늘 임가공, 흑돼지 사육, 샘물 공동개발 등 제주가 비교우위에 있는 제주-북한 경협사업을 제시하면서, 이들 경협 사업은 우선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13)

10)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원국의 지위를 공식 졸업했다.

OECD 산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세계무역경제규모 13위의 선진국 한국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혜적 내지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연대평화의 관점에서 보다 확실한 원조이념 및 정책목표 제시와 함께 ODA 정책 전반에서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시체제를 강화”(권을 외 2006, 228)해 나가는 한편으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전향성이 요청된다. 즉, ODA가 공여국의 외교적·전략적 수단이 아니라 “수원국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능력을 중심으로”(고경민·이희진 2008, 83) 전개되어 나갈 때, 비로소 ODA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제주의 ODA 사업은 아직은 ‘시작의 반’에 머물러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제주형 ODA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sup>11)</sup> 이 점은 경상북도의 경북형 새마을운동 ODA 모델이라든가 강원도의 빈곤퇴치 및 참가형 원조로서의 농촌개발, 경기도의 중남미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분야 특화사업 또는 서울시의 베트남 흥강개발 사업 등과 비교된다. 그러나 더 큰 제약은 “원조규모가 소액이고 지역 대부분이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1개 사업의 원조 규모가 수천만 원에 불과하고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 정책의 일관성과 민간단체들의 연속성이 부족”(이병진 2013, 95)하다는 데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흐름에 발맞춰 ‘늦었다 할 때가 빠른 때’라는 생각으로 제주도는 2012년을 ‘개발협력 지원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그 이후 제주도는 2012년 베트남 학교 건립, 2013년 동티모르 의료장비 지원, 2014년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지원, 2015년 동티모르 한국어학교 교육인프라 지원 등으로 국제 평화봉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드높이는 제주형 ODA 사업의 미래는 앳킨슨(2015, 331)이 제안한 바 GRDP의 1% 수준으로 대폭적인 협력지원을 해 나가는 제주 특유의 돌파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것이다.

향후 국제 평화봉사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제주도 특유의 평화

11) 이와 관련 문순덕(2015)은 제주의 평화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다크투어리즘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ODA사업을 제안한 바 있지만, 무언가의 큰 돌파가 요청된다.

봉사를 진척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의 방향설정이 요청된다. 하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상의 제약을 염두에 둘 때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선택과 집중이 그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7월 해외 ODA 사원의 일환으로 동티모르에 총 6,000만원 상당의 의료물품 기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면서 노하우를 익혀 나가는 한 방편으로 예를 들면 동티모르에 집중하게 되면, 그에 따라 평화봉사의 효능감도 더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2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신생 동티모르는 인구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섬나라로서 주민의 10%가 죽어간 제주의 4·3 비극처럼 독립투쟁과 내전을 거치면서 최소 10만에서 최대 20만이 죽음을 당한 비극에 더 많은 동병상련을 갖게 되는 곳이기에 그렇다.

다른 하나는, 제주도정의 재정적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평화봉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2006년에 조직된 제주평화봉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하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몽골 3회, 캄보디아 3회, 필리핀 1회, 동티모르 2회 등 총 9회에 걸쳐 ‘아시아협력 프로젝트’를 실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제주평화봉사단의 활동 영역을 국가별 사업부로 확대 재편하여 매년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관산학의 협력 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외에도 2012년 민간 차원에서 국제국악원이 캄보디아 우물 지원을 그리고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베트남 학교 지원 사업을 펼친 바 있는데,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평화봉사 열기를 뒷받침해 주는 도조례 제정도 유용해 보인다.

도민 개인 수준에서 대표적으로 신영민은 캄보디아 'Sang Kum Thmey(상 콤트메이)' 지역 우물설치 봉사활동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20만 달러의 사비로 400평 건물에 6개 교실과 교무실, 야외 화장실과 펌프식 우물을 갖춘 'Sang Kum Thmey 금강 고등학교'를 설립한 경우도 있다.(이태운 2015) 이와 같은 개인-단체-평화봉사단 등 다양한 참여자의 평화봉사 사업을 지원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2015년 제주도-제주대학교-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세워졌는데, 제주의 평화봉사와 ODA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널리 기대되고 있다.

## 2. ‘인간’ 차원: 복지평화

사회적 기본재가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는냐는 사회정의의 문제인가 하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문제인 동시에 적극적 평화의 사안이기도 하다. 복지평화의 의제로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불평등이 지속되고 구조화될수록 빈곤의 악화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사회불안과 비평화로 연결된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불평등의 문제를 복지평화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은, 재화가 보다 균등하게 분배되고 접근될 수 있는 사회에서는 그만큼 복지평화는 보다 일상적인 분위기이자 민주적 정치과정의 중심 의제로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복지평화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선거제도<sup>12)</sup>라든가 노동계급의 힘과 같은 민주주의의 수준 그리고 특정의 국면에서는 정치권력 집단의 정책지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빈부격차의 악화로 인해 성장이 얼마나 지체되는가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7.1배와 2000년대 9.1배에 이어 “2012년 34개 회원국 상위 10%가 버는 소득이 하위 10%가 버는 소득의 9.6배에 달”(OECD 2015) 할 정도로 지난 30여년간 전 세계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1985~2005년 34개 회원국들에서 악화된 불평등의 영향으로 인해 1990~2010년 이들 국가들의 누적 성장률은 4.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동일한 맥락에서 IMF(2015) 역시도 과도한 불평등을 줄이면 모두가 이득을 본다고 주장하면서, “소득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5년 뒤 국내총생산이 0.08% 포인트 줄어드는” 데 반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5년 뒤 국내총생산이 0.38% 포인트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과 그 폐해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를 극복해

12) 예를 들면 다수제 선거제도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를 형성, 강력하게 유지시킨다.”(강명세 2014, 148) 그 이유는 비례대표제가 좌파정당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며, 다당제를 통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는 지역구의 이해관계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13) OECD(2015)는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성별임금 격차 해소에 이어 부유층 증세와 질 좋은 일자리 확대, 교육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갈 것인가와 관련하여, 불평등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정치세력이 약해졌기 때문”(박상훈 2015, 113)이라면, 경제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정당민주주의가 중요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로로 총수요의 부족에 대처할 수가”(스티글리츠 2012, 200) 있다면, 불평등 완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수준 또는 정치적 결정 여부에 따라 금융규제라든가 독점금지, 조세개혁 등 경제개혁 아젠다와 함께 교육접근권 개선을 포함하여 실업보험, 사회보장보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보험 등 중하위 계층에 대한 자원강화 등을 통해 복지평화로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보아 무방하다.

복지평화의 수준을 가늠할 있는 지표로서 복지예산을 들 수가 있는데, 2004년 이후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7%로 OECD 평균(1%)보다 훨씬 높다. 복지지출 비중은 1997년 3.6%에서 2009년 9.4%, 2013년 10.2%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복지지출 총 규모는 115조 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총액에 있어서는 2012년의 경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3%로 프랑스 32.1%, 핀란드 29%, 미국 19.4%, 호주 18.7%에 비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강승태 2014, 66)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의 "2014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6%"(한정수 2015, ix)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가장 높은 프랑스(31.9%)와 덴마크(30.1%)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국제비교 보고서의 지적처럼,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은 비교대상인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비교지수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1990-2014년 공공사회복지 분야 전체의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61.98%”(한정수 2015, vii)로, 이는 1인당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가 국민소득이나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나라들의 61.98%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 이들 나라와 비교할 때 근로무능력(20.83%)과 노령(35.68%), 실업(42.88%) 부분의 공공복지 지출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취약한 사회보장 지출은 이마저도 복지관 등 기관 설립이나 중축 등에 쓰일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소득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김교성 2010, 236)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1-2명이 약 300여개 가까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도 복지평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은 2010년 439,703백만원(16.0%), 2011년 480,592백만원(16.8%), 2012년 541,898백만원(17.5%), 2013년 647,785백만원(19.2%), 2014년 795,684백만원(22.2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764,953백만원(20.03%)으로 줄어들었다.(정영태 2015, 16) 이에 따라 2015년 제주의 사회복지 비중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7위 세종시(18.6%)보다 한 단계 높은 16위 18.9%로 10개 도의 평균인 31.4%에는 훨씬 못 미치고 전국 평균 25.4%에도 미달하여, 사실상 전국 꼴찌이다. 이는 사회복지 비중에서 1위 전북(37.2%)과 2위 광주(36.2%)는 차치하고라도 14위 강원(27.8%)과 15위 울산(24.3%)과 비교해 보더라도 얼마나 적은 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이상호 외 2015, 40)의 <표 2-16> 평화의 섬 제주에서 왜 복지평화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잘 보여줄 수가 없다.

제주의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8개 사업에 총 25,402,126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현금성 급여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영태 2015, 46) 즉, 노인의 경우 118,861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 아동 5,644명, 장애인 13,901명, 가정위탁아동 892명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보육 교직원 및 종사자 35,172명이다. 복지 증대가 지자체의 의욕만으로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더 강하게 시동을 갈고 창의적 노력을 더 하느냐의 측면에서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를 꾸준히 해 나가는 정책 수행의 지속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도민적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sup>14)</sup> 향후의 새로운 복지평화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앳킨슨(2015)이 제안하는 기초자본(최소한의 상속)<sup>15)</sup>과 캐리

14) 기초상속이든 기본소득이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긍정과 비판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 자료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5)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앳킨슨의 15가지 제안 가운데 6번째 제안은 ‘모든 성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자본(최소한의 상속)이 있어야 한다’(앳킨슨 2015, 242)는 것으로, 이는 모든



플라니 레빗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앳킨슨(2015, 242-243)은 세대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최저상속을 활용할 필요에 주목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시기를 18세로 하는가 하면 그 자격도 자녀수당을 받았던 사실과 연계시키고 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레빗은 “돈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한 ‘적선’이 아니라 ‘시민권’”(황예란 2015, 72에서 재인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정치적 해결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자본 또는 기본소득 등의 제언은 이로써 일정하게 재정적 독립과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켜 주면서 기회의 평등을 촉진한다는 데에 그 유용성이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을 일반 세금에서 충당하도록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sup>16)</sup> 기본소득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기본소득만큼의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사 없이 무조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치부된다.<sup>17)</sup>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일정한 소득 또는 상속을 보장해 주지는 기본소득론은 이른바 ‘재분배의 역설’(Korpi and Palme 1998, 681-682)에 주목하는 보편복지 차원의 담대한 제언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는 중간층의 복지재원 거부로 복지규모가 줄어들지만 중간층까지 보편적으로 복지가 확대되면 중간층의 복지재원 찬성으로 복지규모가 커져 가난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기본소득의 미래 가능성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1976년 석유 수입을 영구기금으로 하여 1인당 월 1,000-3,000 달러의 기본적인 생활비로 보전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sup>18)</sup> 2013년 스위스에서는 성인인 스위스 국민에게 월 2,500 스위

---

시민은 이전 세대가 축적한 부를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 16)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문제와 함께 정부에의 의존적인 삶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 하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 17) 노동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시민배당금’으로 파악하는 김중철(2014)은 ‘이자 없는 돈’을 발행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 18) 알래스카 모델에 비추어 제주의 경우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 수익금과 제주개발

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발의'가 제출된 바 있지만 부결되었다. 20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에서는 약 33만명의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실험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오에리 2015)

기본소득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과 투자에 대한 미국적 생각에 보다 잘 맞는 것”(Dryzek and Dunleavy 2015, 1285)으로서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라는 제안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분 급여란 성년이 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적 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2만 달러씩 4년에 걸쳐 총 8만 달러를 받아 교육, 사업, 주거, 여행 등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일한 조건은 죽을 때 이자와 함께 이 돈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사회적 지분급여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의 생활고를 염두에 두면서 기획·추진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일정한 연령대(만 19-24살)의 3년 거주 청년들에게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월 10만원 내지 분기별 25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프로젝트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sup>19)</sup>

### 3. ‘자연’ 차원: 생태평화

자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구-생태-자원의 한정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 즉, 생태학적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생태평화가 시작한다는 것이다. 드라이젝과 던리비(Dryzek and Dunleavy 2014, 336)의 지적처럼, “생태학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가장 온건하고 기업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옹호론자부터 가장 급진적인 녹색 생태-무정부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환경론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기본 가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생태평화는 “더 커다란 ‘자

---

공사의 면세점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을 고려할 수 있다.

19) 성남시의 청년배당 프로젝트에서는 자원 문제와 관련하여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훈 2015, 35-36)

신'(Self)으로서의 자연과의 심오한 생태학적 일체감"(Devall and Sessions 1985)을 구현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생태평화의 시작은 생태자연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선은 환경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두었다.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의 보고서에서 일찍이 정의된 바,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마이어 2012, 95-96에서 재인용)을 뜻한다. 그 이후 1992년 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 재확인된 것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위기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구든 희생을 당하지 모른다는 인간중심적인 접근의 하나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지속가능성 접근으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반 흐름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회의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성 접근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구성요소를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기업과 만나게 되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적인 성장'(continued growth)으로 탈바꿈되면서 생태학적 고려는 사라져버리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정책심의를 할 때 지구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만다"(Dryzek and Dunleavy 2015, 340)는 데에서 지속가능 접근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건한 형태의 지속가능성 접근을 넘어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집합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관련 대표적으로 2013년 IPCC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의 5차 과학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95% 확실"(박일수 외 2014, 189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명기하는 한편으로 21세기 말에 이르면 지구 지표온도 변화는 1.5°C를 초과하고 평균해수면은 0.52-0.98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박일수 외 2014, 200) 이와 관련 환경부도 지표온도가 2°C 상승시 식량생산량 감소 등으로 "세계경제 총손실액은 소득의 0.2% - 2.0%(1,400억 - 1조 4천억 달러)"(환경부 2014, 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어 2014년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려면 앞으로 수십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까지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권하고 나섰다.(IPCC 2015, 32) “전 지구평균기온이 지난 133년간(1880-2012) 0.85°C 상승하고, 평균 해수면은 110년간(1901-2010) 19cm 상승”(IPCC 2015, 33) 함으로 인해 폭염-가뭄-집중호우 등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지구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한국은 독일과 함께 2015년 1월부터 전국 단위로 강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sup>20)</sup>를 본격 시행하는 선발 국가로 나아가고는 있다. 즉,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이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통해 2017년까지 525개 업체에게 탄소 배출량을 20%로 줄여나가고자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완화의 노력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경우(RCP 8.5) 21세기 말 평균기온은 약 6.0°C 상승하고 강수량은 20.4% 증가가 예상되며, 저감노력이 실현될 경우(RCP 4.5)에는 3.4°C의 기온상승과 17.3%의 강수량 증가가 예상”(이동근 외 2013, 20)된다고 한다. 그리고 “폭염일이 연평균 8.5일인데, 21세기 말에는 RCP 4.5의 경우 32.3일, RCP 8.5의 경우 65.9일로 나타나며...열대야 일은 현재 연평균 3.7일인데, RCP 4.5의 경우 34.6일, RCP 8.5의 경우 62.8일로 급격하게 증가”(이동근 외 2013, 21)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은 대표적인 건강권 위협 요인으로서 고령화와 맞물려 대표적인 기상재해가 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명권 위협은, 서울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현재 10만명당 0.7명이지만 20년 뒤부터는 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가뭄-집중호우 등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어 개별적 대응능력을 넘어서는 모종의 집합적 합심이 요구되지만, 여전히 대응은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생태평화의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로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생명권-건강권-생계권 등에서 불공평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비평화 사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업이나 국가별로 탄소 배출량을 정해둔 다음 허용치 미달분을 매입하거나 그 반대로 초과분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는 당연히 화산섬 제주에서부터 생태중심적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즉 인간은 거대한 우주 체계의 일부일 뿐이며 자연은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며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는 스승으로 대하는 생태평화 의식의 확산과 심화가 요청된다.

이처럼 도민이 비인간 세계 내지는 비인간 생명체가 그 존재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태존중 의식을 얼마나 내재화하여 갈 것인가와 함께 보다 실천적으로는 점증하는 기후변화의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의 한 방편으로 일상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줄여나갈 것인가가 바로 2010년대 제주에서 저탄소 접근으로 정책적 강조를 두고 있는 ‘전기차 시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신재생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생태평화의 첫걸음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보다 직접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중앙집중형 화석에너지 체제에서 벗어나 도민이 “개인 태양광 발전업자 혹은 지역 발전소의 투자자, 혹은 지자체 소유 발전소의 투자자로 생산 과정에 참여할 기회”(박진희 2013, 162)를 갖도록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분산형 에너지 체제에서는 데빈-라이트(Devin-Wright 2007, 71)가 주창하는 바의 ‘에너지 시민권’을 통해 주민들은 소형 풍력발전이나 소형 열병합 발전 시스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기술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이고 에너지 정치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 기획 단계에서의 의견 제시와 투자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에너지 공급에 일대 혁신을 기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양한 설계들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다. 단열재의 도입, 빗물 활용 시설, 옥상공원, 개인 지붕에 태양광 전지판 설치, 1인당 주택평수의 제한 등 일상적 주위에서 찾아보고 합심하면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는 많은 방안들이 존재한다.

둘째, 일상에서의 저탄소 실천 가운데 하나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 설치하여 채소 등 ‘햇빛 농사’의 즐거움과 함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개혁할 정치적 각성을 몸소 체험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조홍섭 2015, 2) 이렇게 기업형의 대단위 태양광 단지 말고도 주민들에 의한

소형 태양광 발전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를 위해서 서울, 대전, 수원, 창원 등 지자체에서는 설치비의 50~7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제주에서도 풀뿌리 차원에서 태양광 전기의 일상화를 통해 저탄소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260W급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하루 2시간씩 가동할 경우 1달 얻게 되는 전력량은 15.8KWh로 일반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의 5%에 지나지 않지만, 티끌 모아 태산으로 저탄소의 생태평화를 찾아가는 참여 노력은 소중해 보인다.

셋째, 제주의 미래정책비전 가운데 하나가 전기자동차를 통해 탄소 없는 환경 섬을 만들자는 데에 두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제주도민의 힘으로 기획-진행시켜 나가는 국제전기차엑스포(IEVE) 개최는 그 하나의 시작이다. 김수종(2015)의 지적처럼, 국제전기차엑스포의 의의는 전기차 보급을 넘어서서 “제주의 산업적-문화적-사회적 변화의 창조적 통로”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2020년까지 제주도내 차량 13만 5,000대로 40%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이어 2030년까지는 37만 7,000대 모두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포부가 얼마나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지만,<sup>21)</sup> 전기차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에 따라 제주의 산업구조와 교통문화 그리고 환경의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30년까지 해상에 1900MW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풍력으로 전력 57%를 맡고 나머지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으로 채우겠다고 명실상부한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맞춰 어떤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이다.(전병역 2015, 15) 왜냐하면 국내의 기존 전력 비중이 석탄(39.1%)과 원자력(30%), LNG(21.4%), 신재생 에너지(5%) 순임을 고려한다면, 화석연료 전기를 쓰는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소비전력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3%일뿐 약 49%가 전남 해남과 진도에서 해저송전선을 통해 들어오고 나머지 대부분이 3곳의 화력발전소에서 조달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21) 2015년 10월 LG-제주도-한전은 2030년까지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를 100% 보급해 ‘바람으로 전기차가 달리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포부의 ‘글로벌에코플랫폼 제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넷째로 제주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보급과 활성화를 또 하나의 보완적 접근으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sup>22)</sup> 제주처럼 경사진 도로가 많은 지형에서 2년 수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라 할지라도 최소한 중·단거리에서는 그 유용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는 시속이 오토바이의 40km의 반인 20km 밖에 안 되지만 위험성이 작고 운동효과가 크며 연료비는 반도 안 된다는 장점이 크다.(박인성 2015) 다만 현실에 있어서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로 전용에 한정되는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법적 완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남도영 2015) 향후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기술개발에 비추어 볼 때, 전기자전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용지원 정책을 통해 전기자전거가 선도적으로 저탄소의 생태평화 섬으로 나아가는 제주의 한 포석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IV. 나오며

평화 없이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 너나 할 것 평화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꿈이며 목표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누구나 바라는 평화가 쉬이 확보되지 않는다. 도처에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서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비평화가 널려있다. 전쟁과 폭력만이 아니라 빈곤, 오염, 억압, 무질서, 차별, 불공정 등 평화 아닌 것들이 매일의 신문 기사를 덮고 있다. 그럼에도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는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오고

22) 또한 저탄소를 지향하는 전기차 보급의 유용성과는 별개로 운송수단에 있어서 자가용 중심의 교통문화를 견제하는 것으로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은 여전히 생태평화의 제주 미래를 위해서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담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있다.

이 글은 평화의 섬 지정 이후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세계평화의 섬이 교류협력 중심의 ‘세계’(통일과 연대)에 치우쳐 있는 데서 벗어나 ‘인간’(복지)과 ‘자연’(생태) 차원에서의 평화 확산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에 주목하였다. 즉, 향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세계-인간-자연’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각각 통일평화와 연대평화, 복지평화 그리고 생태평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의 섬 제주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적극적 평화를, ‘세계’와 관련해서는 감귤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과 ODA를 통한 국제평화봉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간’ 차원으로는 빈곤 해소와 격차 줄이기 등을 통한 복지권 확대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기후변화에의 대처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섬 실현 가능성으로 타진하였다.

이 글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적극적 평화 사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평화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이른바 ‘실천-의식의 선순환’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은 선실천 중시의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통일평화와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연대평화에 덧붙여 복지평화와 생태평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평화의 섬 이념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실용적 정책제언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세계평화의 섬이 다양한 방식과 통로로 평화사업을 실천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평화의식 고취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평화의식을 창출-공유-확산-심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일상적 삶에서 세계평화의 섬의 비전에 어울리는 평화문화가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갈통, 요한 지음, 강동일의 옮김.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 강근형. 2007. "해군기지와 제주발전: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화연구』(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18권 제1호, 73-102.
- 강남훈. 2015. "성남 청년배당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녹색평론』, 통권 제144호(9-10월), 28-38.
- 강명세. 2014. "빈곤의 정치경제: 상대적 빈곤의 결정요인," 『세계지역연구논총』(한국세계지역학회), 제32집 1호, 139-165.
- 강승태. 2014. "양극화 해소 못하는 복지시스템," 『매경이코노미』, 1764호(7.2), 66.
- 강주홍. 2012.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과제," 『국토』(국토연구원), 9월, 6-15.
- 고경민. 2008. "적극적 평화 구현을 위한 멀티트랙 외교와 다층적 거버넌스의 함의: 제주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24권 제2호, 135-169.
- 고경민 · 이희진. 2008.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혁신방향: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세종연구소), 제14권 4호, 61-89.
- 권을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6-03.
- 김교성. 201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정책』(한국사회정책학회보), 제17집 1호, 215-240.
- 김부찬. 2002. "제주 평화의 섬 유형과 정책적 과제," 『법과 정책』(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제8호, 87-106.
- 김수종. 2015. "전기차엑스포가 중요한 이유 세가지," 『제주의소리』(3월 5일).
- 김종철. 2014. "기본소득, 새누리당이 먼저 낚아챌 것," 『프레시안』(11월 10일).
- 김태윤. 2015. "제주미래비전의 주요 내용," 제주지방행정동우회와 제주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미래비전 정책세미나>. 10월.
- 남도영. 2015. "4대 장애물에 덜컹덜컹... 속도 못 내는 전기차전거," 『국민일보』 (4월 24일), 19.
- 마이어, 베르트 지음, 김홍옥 옮김. 2012.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둘 다 가능할 수는 없는가』. 서울: 길.

- 문순덕. 20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특성화 전략과 과제>, 제주 발전연구원 JDI 정책이슈브리프, No.208.
- 박명규 · 백지은. 2013. "21세기 한반도발 평화인문학의 모색," 『동방학지』(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161집, 39-75.
- 박상훈. 2015. 『정당의 발견』. 서울: 후마니타스.
- 박인성. 2015. "요즘 대세 '1톤 트럭'...전 좀 다릅니다," 『오마이뉴스』(3월 13일).
- 박일수 외. 2014. "IPCC 제5차 과학평가보고서 고찰," 『한국대기환경학회지』(한국대기환경학회), 제30권 제2호, 166-200.
- 박진희. 2013. "시민참여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철학: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철학』(한국환경철학회), 제16집, 159-187.
- 스티글리츠, 조지프 지음. 이순희 옮김. 2012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서울: 열린책들.
- 신용인. 2013. "제주의 통합비전,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법과 정책』(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제19편 제2호, 273-306.
- 양길현. 2015. "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 찾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생태평화의 섬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제30권 1호, 207-240.
- 양길현. 2005. "화순항 래군기지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협력안보의 시각," 『한국과 국제정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21권 제4호, 53-81.
- 양길현 · 장원석. 2002.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18권 제4호, 199-226.
- 엣킨슨, 앤서니 B. 지음, 장경덕 옮김. 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글항아리.
- 오애리. 2015. "시가 시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문화일보』(6월 26일), 17.
- 윤철수. 2014. "감굴 북한보내기, 제주-북한 크루즈 관광라인 추진," 『헤드라인제주』(10월 21일).
- 원희룡. 2015. "<전문>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사," 『제주의소리』(5월 21일).
- 이동근 외. 2013. <제2차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II):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을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 이병진. 2013.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정책연구』(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구원), 제3권 제1호. <http://www.logodi.go.kr/Sub/Board/notice>

e/noticeView/asp?show\_no=878& check\_no=3&now\_tab=1&c\_no=6824&c\_step=O&c\_relation=2&c\_relation2=235&page=1

- 이상호 외. 2015.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 이태윤. 2015. "캄보디아에 학교 짓는 이유요? 밝은 미래 만들고자," 『한라일보』 (5월 9일). <http://www.ihala.com/read.php37aid=1431158796499003100>
- 임현진 공석기. 2014.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 경기: 나남.
- 전병역. 2015. "제주서 시동 건 '전기차 시대' 아직 갈 길이 멀다," 『주간경향』, 통권 1147호(10월 20일), 14-17.
- 정영태. 2015.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15-03.
- 정주진. 2015. 『평화를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13. <세계평화의 섬 사업계획 변경 용역>, 최종보고서.
- 제주도. 2005. <제주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내부자료.
- 조홍섭. 2015. "당신이 '태양광 발전'의 주인공이 된다면," 『한겨레』(5월 2일), 2.
- 진희관. 2014. "지방자치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경상남도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평화문제연구소), 제26권 2호, 115-150.
- 한정수. 2015.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사업평가 15-02(통권 337호). 국회예산정책처.
- 환경부. 2014. <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보고서 승인>(보도자료, 3월 31일).
- 황규성. 2014. "평화복지국가의 사회윤리적 기반," 조홍식·장지연 엮음,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서울: 이매진, 34-63.
- 황예량. 2015. "기본소득, 시민을 살아있게 할 대안," 『한겨레 21』, 제1059호, 70-73.
- Dryzek, John S. and Dunleavy, Patrick 지음, 김욱 옮김. 2015. 『민주주의 국가이론』. 서울: 명인문화사.
- IPCC. 2015. "온실가스 감축 여부가 인류 존망 좌우," 『참 좋은 환경』(환경신문사), Vol.50, 1월호, 32-35.
- Devall, Bill and Sessions, George. 1985.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Salt Lake Vity, UT: Peregrine Smith.
- Devine-Wright, Patrick. 2007, "Energy Citizenship: Psychological Aspects of Evolution in

-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Joseph Murphy, ed., *Governing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London, UK: Earthscan. pp. 63-86.
- Galtung, John. 1968. "Peace," David L. Sh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1,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pp. 487-496.
- IMF. 2015. "All Will Benefit from Steps to Cut Excessive Inequality - Lagarde," *IMF Survey Magazine: In the News*. June 17. <http://www.imf.org/external/pubs/ft/survey/so/2015/new061715a.htm>
- Korpi, Walter and Palme, Joakim.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3, No.5, 661-687.
- OECD. 2015. "Improving job quality and reducing gender gaps are essential to tackling growing inequality," <http://www.oecd.org/social/reducing-gender-gaps-and-poor-jobs-quality-essential-to-tackle-growing-inequality.htm>. 21/05/2015.
- Overview of HDR. 1994. "An Agenda for the Social Summit," <http://gd.tuwien.ac.at/soc/un94/e94over.htm>
- Palme Commission. 1990. "Final Statement of the Palme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Disarmament*, Vol.XIII, No.1, 165-186.

투고일: 2015.08.30.	심사일: 2015.09.11.	게재확정일: 2015.10.12.
------------------	------------------	--------------------

【ABSTRACT】

## Appraisals and Suggestions on the Practice of Positive Peace Projects in Jeju Island of World Peace

Yang, Gil-Hyun |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policy study. It suggests various ideas and policies in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in relation with our daily lives. It focuses on what and how to do in order to upgrade the vision and policy of Jeju Island of World Peace(JIWP) in the fields of welfare and ecology in addition to two Koreas' peaceful unification and peace corps. It aims at promoting the virtuous cycle between the consciousness and the practice, but puts a priority on the concrete movement and especially some progressive experiments because they naturally enhance upgraded consciousness and then lead to the widely settled peace culture in harmony with the upgraded vision of JIWP.

The article attempts to represent a wisdom collection of how to diffuse and deepen peace consciousness among Jeju residents through the step-by-step policy implement based on the last 10 years' experience. It puts a focus on the possibility of jumping up of JIWP from the world to the human and nature. It means the bottom-up approach of 'from Jeju to world,' instead of top-down approach of 'from world to Jeju.' So, the current article deals with 4 fields: unification peace, solidarity peace, welfare peace, and eco-peace. While there are a lot of policies in the level of JIWP, this paper suggests renewed attempts in 4 areas: the improved cooperations between South-North Korea through the continuous donation of Jeju tangerines, the diffusion of peace corps through the increasing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enforced welfare rights by reducing the poverty and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effective governance to handle climate change through the systematic practice of making JIWP a low carbon island.

---

**Key Words** | Jeju Island of World Peace(JIWP), Positive Peace, Unification Peace, Solidarity Peace, Welfare Peace, Eco-Peace.